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99
----------	------

발의연월일 : 2025. 3. 27.

발 의 자 : 강선영 · 강대식 · 곽규택
고동진 · 이인선 · 이달희
김대식 · 조지연 · 이만희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장래 병역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의무기간을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51조제3항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장래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장래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포함한다), 경력, 건강상태 등의 주관적 요소 뿐 아니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래의 손해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751條(財産以外의 損害의 賠償)</p> <p>① · ② (생 략)</p> <p><u><신 설></u></p>	<p>第751條(財産以外의 損害의 賠償)</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 따라 장래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장래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포함한다), 경력, 건강상태 등의 주관적 요소 뿐 아니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및 고용조건 등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u></p>